

아시아경제 - 중국 선두로 계속 성장 전망

세계경제는 2007년에도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4.9%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외 싱크탱크(think tank; 두뇌집단)의 예측도 4%대로 거의 비슷하다. 나라나 지역별로 경제성장률을 나누어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EU, 일본이 1~2%대이며, 일본을 뺀 동아시아 지역은 7%대를 계속 지켜 세계 경제성장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면서도 약간이나마 성장속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요인은 견인역(牽引役)을 맡고 있는 중국의 긴축정책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일본 섬유산업의 입장에서 해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의 경제 동향에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아시아 경제에 대한 견해를 소개해 본다.

◎ 중국은 과열을 억제 중이며 동남아시아와의 일체감 커져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은 2007년의 중국 경제성장률이 9.5%로 감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全人代)에서 2007년의 경제성장 목표를 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목표치는 여느 해 같이 최저한(最低限)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플러스 1~2%를 웃도는 성장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정부는 2007년에 긴축자세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2006년 및 2005년과 비교하면 8% 목표에 비슷하도록 노력할지도 모른다.

한편 정말로 8%가 되어버리면 이제까지 4년 계속해온 두 자리 성장이 한

자리 수로 떨어지게 된다. 경기 후퇴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으로서는 리스크(risk)가 있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연해부(沿海部)의 과열된 경기를 억제하면서도 내륙부(內陸部)의 경제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ADB가 예측한 수치와 비슷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웃 아시아의 여러 나라나 지역들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순조롭게 돌아갈 경우 두 나라로의 수출을 지렛대로 ADB가 제시한 수치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는 2007년에도 비교적 순조롭게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과 2009년에도 큰 브레이크가 걸릴만한 요인은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10년 정도의 흐름을 돌아보면 구미시장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가공하여 수출하던 상황에서 공장이 잇따라 중국에 집중하는 현상이 생겼다. 이것은 미국 등에서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장은 모두 중국자본이 아니고 일본, 대만, 한국, 동남아시아의 화교와 같은 해외자본에 의한 것이며, 코스트가 싼 중국으로 진출하여 수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경을 넘어 자본이 이동함으로써 각 나라나 지역의 경제성장의 배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문제도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외자가 중국에 투자됨으로써 중국경제가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내 소비시장이 자라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제휴협정) 체결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어 중국과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계속 복합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8%라는 숫자가 경기가 좋지 않은 결과인지

과열을 억제한 결과인지 판단이 어렵다. 정부로서는 이제까지 과열을 막고자 하였으나 막을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의 경우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고정자산투자와 수출이다. 고정자산투자는 전체의 24%이고 이에 비하여 소매소비총액은 14%를 밑돌고 있는데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수출은 27%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비율이다. 경제구조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어 정부로서도 고정자산투자와 수출이 확대되는 데는 어느 수준에서 제동을 걸고도 싶을 것이다.

◎ 중국경제는 자산투자와 수출이 견인

중국은 GDP 총액이 늘고 있으나 비정상적인 구조를 변화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은 GDP에서 개인소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선진국에서는 70% 수준인데 중국은 40% 수준이다. 그 이유는 90년대의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액의 개인자산이 국유은행에 예치되어 고정자산투자로 사용되었다. 전인대(全人代)도 아직 사회보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하였고 대졸이라도 취직난이 심하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소비의 신장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경제를 급격하게 개혁하면 성장을 둔화시켜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는 무엇보다도 공산당이 두려워하고 있어 아마도 거친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다. 위안고(元高)가 커졌는데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민영기업이 수출 드라이브를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외자가 중국 내로 들어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수출은 중국경제를 받치고 있는 큰 기둥이다. 앞으로 더욱 위안화의 환율이 올라가면 이에 따라 수출도 줄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도태(淘汰)가 진행됨으로써 연착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개인소비력은 인민위안(人民幣) 베이스(base)로 약 7조 6,000억 위안이며, 단순외환계산(單純外換計算)하면 120조엔인데 인민위안은 구매력평가에서 5배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600조엔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바로 13억명으로 나누어 1명당의 소비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인구가 5억명되는 연해부, 도시부(沿海部, 都市部)에서 전국의 70%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상하이에서는 왜 일본보다도 높은 브랜드 제품이 설 새 없이 팔리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남은 돈은 투자하게 되어, 공급과잉이 생기고 값싸게 해외로 수출되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 그런 구조에서 활동주역이 되는 플레이어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상황을 보면서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예컨대 사회적인 컨센서스(consensus; 同意)를 얻을 수 있는 환경문제나 생(省)에너지 문제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어느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수밖에 없다.

2007년의 전인대(全人代)에서 논의된 의제 중 일중(日中)비즈니스에 관한 문제로는 ‘중국에서 값싸게 만들어 돈번다’ 즉 ‘도로 일본으로 갖고 가다’ 방식으로 엔조이할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느끼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의 큰 관심사는 기업소득세법이 가결되어 외자나 내자 모두 세율이 통일된다는 문제이다.

예컨대 중국에 공장을 세워 50년 동안 경영하는 경우 소위 ‘2면3반(2免3半)’으로 이익이 나와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를 2년간 면제받고 그 후 3년간은 반감된다는 초특별 서비스를 받아 왔다. 그러나 그것도 불과 5년 동

안의 얘기이며, 50년의 10%이다. 여기에만 의지하고 있으면 장기 경영은 불가능하다.

한때는 외자라면 무엇이든 환영하여 저코스트경영(低cost經營)을 기뻐하였는데, 지금부터는 하이테크 산업만 환영하고 노동집약형 산업은 필요 없다는 등으로 선별되는 시대가 됐다. 중국이 언제까지나 일본을 위하여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만 하는 나라는 아니다. 중국 내 시장을 눈여겨보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서의 독립법인으로서 현지경영으로 바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지에서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여 키워갈지가 포인트가 된다.

◎ ‘일본으로 되가져가는 생산’에 역풍 불어 중국전략 재검토 시작

중국은 외자에 대하여 ‘선별(選別)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 전부터 있었는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별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중국경제에 유익한 외자는 남아 있고 부가가치가 낮은 외자기업은 필요 없다는 자세가 뚜렷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그 동안 외자기업에게 가장 우대하던 조치는 낮은 소득세율과 함께 생산설비의 수입면세였는데 이 특전도 외자와 내자의 대우를 같게 함으로써 없어질 것이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생(省)에너지, 환경보호의 문제에 주목하고 싶다. 작년에는 에너지 효율화, 오염물질 배출 삭감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금년에는 수치목표(數値目標)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각 기업에게는 강제적인 시정시책(是正施策)이 추진될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수출형 기업에게는 증치세(增值稅)의 환부율(還付率) 인하나 취소, 보

세구(保稅區)의 축소, 기업선별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을 싸게 만들어 싸게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엄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시장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확보하느냐가 포인트이다. 단순한 공장 경영이 아니라 본사 기능도 옮겨 현지에서 경영을 판단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의 여러 개혁은 경제발전의 흐름에 따랐으며, 1980년대에 이어 아세안 여러 나라에서도 경험이 끝난 문제이다. 중국의 경우는 여유노동력이 압도적으로 컸으므로 10년 동안 성장이 계속되었다고 본다. 다만 최근 여러 해 동안은 내륙부에서도 노동수급이 팽박(逼迫)해졌으며, 도시로 돈 벌고자 갔던 노동자가 봄철 휴가로 고향에 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 많았다.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만이 중국에서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관심은 수출신장인데 더 이상 수출 전체에서 이익을 올릴 수도 없다. 내용을 엄선하여 중국 내에 부가가치가 남도록 하는 선별 정책이 작년부터 뚜렷이 보였다. 언제나 앞서가고 있는 광둥성(廣東省) 근처에서도 중심부에는 하이테크 산업이 아니면 필요없다고 하며, 그 동안의 섬유 등 노동집약형 산업은 주변지역으로 보내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선진지역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각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

여러 외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하여 섬유쿼터(quota)가 2004년말에 철폐된 후로 구미와의 마찰이 본격화되었다. 일본과도 한때 마찰이 있었는데 시차를 두고 구미도 중국의 위협을 경험하게 된 셈이다.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민위안의 절상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정부로서는 그 압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대신 여러 가지 우대조치를 없애서 수출의 급증을 억제하게 되었다. 우대조치나 저코스트를 받아들여 값싸게 수출하던 기업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중국은 1978년말에 ‘개혁·개방(改革·開放)’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금년이 28년째가 되는데, 중국도 그 동안 문화대혁명으로 큰 상처를 남겼으며, 그 광대한 국토와 방대한 인구를 거느리며 이제까지 잘 성장해 왔다고 본다. 여기까지 성장해 왔으면 지금은 당연히 정책도 바뀌야 한다.

중국의 노동력 문제를 보면 공식적인 통계의 실업률은 4~5%이나 실태는 그 몇 배라고도 하는데 상하이 등 연해부에 있는 봉제공장의 일손이 모자라서 안휘성(安徽省) 등으로 공장이 계속 이전해가고 있다. 그런데 안휘성에서도 노동력이 5만명 부족하다고 한다. 난처해진 성정부(省政府)는 상하이의 가라오케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여성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가기를 싫어하였다.

좌우간 앞으로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은 오지(奧地)로 가지 않을 수 없다. 한때는 노동력이 부족하던 홍콩이 공장을 광둥성(廣東省)으로 옮겨 ‘전점 후창(前店後廠; 앞에는 상점이 있고, 뒤에는 공장이 있다)’이라고 불렀는데 같은 현상이 상하이와 화동(華東)지역 등에서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 ‘플러스 원’은 망설이지 말고 중국 내 소비시장으로

중국의 어떤 봉제공장의 예인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상하이 근처에서 찾아다녔으나 여러 개발구(開發區)로부터 그런 프로젝트에는 땅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땅은 비어 있는데 그것은 하이테크 산업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이 상하이 근교에 자리 잡고 싶어도 어려워지는 경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1990년대 전반에는 5층 건물의 봉제공장을 건설하는 데 1억엔 투자하면

되었는데 지금 같아서는 3억엔은 들 것이다.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을 세우고 일본으로부터 공장장을 파견하던 것이 언제까지나 중국에서의 생산 전략이 될 수는 없다.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커머셜 베이스(commercial base)로 발주할 수 있는 좋은 공장은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발상을 바꿀 시기가 되었다.

종전에는 종업원도 18세~20세로 100명 모집하면 1,000명이 응모해 오는 상황이었다. 반대로 지금은 젊은이가 싫어하는 직종으로 되었다. 그러나 상하이 주변에서는 30세~40세 전반(前半)으로 육아에서 한숨 돌린 여성이 파트 아르바이트(part arbeit)를 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젊은 사람의 정규고용이 아닐지라도 유연한 발상을 받아들이면 노동집약형 산업도 살아남을 길은 아직 있다고 본다.

그만큼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이므로 매크로(macro)로는 잉여노동력을 안고 있으면서 지역적으로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보이면서도 성장해 갈 수 있겠다. 연해부의 봉제공장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마이크로(micro)의 문제이다. 업종이 좋고 나쁘고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노동력의 유동성이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잉여노동력이 있는 내륙으로 공장을 옮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중국으로의 일극집중(一極集中)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를 경감하려는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런 발상은 일본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구미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갖고 되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철새처럼 차례로 값싼 곳으로 옮겨가면 된다. 문제점은 섬유에 대하여도 서포팅 인더스트리(supporting industry)는 절대로 필요하며, 중국 섬유산업의 기술을 키운 것은 일본이다. 모처럼 키운 중

국의 기술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 봐도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밸런스가 잡힌 경영을 생각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중국 내 시장도 커지고 있으므로 ‘차이나 플러스 원 인 차이나’라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발상이 구미에 없는 것은 중국을 주로 판매거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중국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어디까지나 중국시장에 판다는 생각이다.

‘플러스 원’의 후보국으로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곳은 베트남이나 인도일 것이다. 우선 베트남은 인구가 8천만명인데 일본이 중국에서와 같은 정도로 많이 진출하면 수년만에 임금이 크게 올라 중국 대신의 도움이 안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관심을 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도는 잉여노동력이 있는데 중국 이상으로 노동력의 유동성이 없다. 게다가 카스트(caste)제 때문에 제조업의 지위가 낮은 직종으로 되어 있으며, 사람을 모으기가 어려운 것 같다. 제조업의 거점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분산은 필요한데 역시 중국의 내부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의 가공산업계에서는 중국이 풍요롭게 되고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을 네거티브(negative)로 보는데,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은 포지티브(positive)로 보지 않고 있다. 구미나 화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만들어 갖고 돌아가는 것만을 생각하느냐 중국에서 판매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차(差)이다. 이런 것은 경영자가 선택할 문제이지만 요즘 그런 말이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생산거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례는 많은 것 같지 않다. 모두들 냉정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